

원불교 교구법인 통합과 분리에 대한 고찰

1. 서론

원불교 교단 내에서 교구법인의 '통합'과 '분리'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교구 자치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핵심 과제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구조 개편을 넘어, 교단의 미래 방향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법인 분리는 각 교구의 자율성과 책임 운영을 통해 현장 교화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법인 운영상의 여러 한계에 직면하며 통합 논의가 대두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원불교 교구법인 통합과 분리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 과정, 각각의 장단점, 핵심 쟁점이었던 세무 및 행정 문제의 실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교훈과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역사적 배경 및 전개 과정

교구법인 설립(분리)에 대한 논의 시작은 교구 자치 강화를 목표로 한 교구자치제 논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기78년(1993년) 임시수위단회와 정기수위단회에서 교구자치화에 대한 원칙적 합의와 함께 권한 이양 작업이 결의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원기90년대에 들어와 「제7차 교구 개정 개정안」, 「제8차 교구 개정 개정안」, 「제9차 교구 개정 개정안」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군종교구에 대한 구체화이었다. 그동안 교구자치화의 안정과 재도약을 위해 교구 재정의 강화를 위한 교구별 교화지원재단 설립이 검토되었는데, 그것이 원기 93년에 설립된 ‘원불교 ○○교구 유지재단’이다.

또한 원기 95년 교구자치화에 따라 본격적인 교구법인 설립(분리)은 원기95년(2010년)과 원기96년(2011년)에 걸쳐 두 차례 시행되었습니다. 1차 교구법인 설립(분리)은 대전충남, 부산, 서울교구가 설립(분리)되었으며, 2차 교구법인 설립(분리)은 광주전남, 경기인천, 경남, 대구경북, 전북교구가 추가로 설립(분리)되어 총

8개 교구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교구별 특성에 맞는 교화 전략을 개발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현장 중심 교화를 실현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인 분리 이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교구법인 설립에 따른 교단 헌규 규정 개정 준비가 부족했고, 원티스 회계가 교구법인별 구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구법인이 설립되고 원불교 교단 단일 회계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인한 국세청 세무행정 등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교구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재)원불교와 교구법인의 회계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점을 갖고 법인 세무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교구에서 법률, 세무, 회계 등 전문 인력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행정의 복잡성과 운영상 어려움이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법인 간 자금거래, 유기적 협력 약화, 교구법인의 재정적 취약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한계와 현장의 혼란, 지속적으로 높아진 행정·법적 관리 부담에 대응하여 분리 시행 8년 후 원기103년에 제233회 임시수위단회에서 다시 통합으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원기104년 11월 제240회 정기수위단회에서 법인통합의 실현을 검토한 결과 교구자치 실현과 교화를 위한 교구편제 개선의 정책방향에 따른 교구자치제 정착과 완성이라는 방향과 일치되지 않은 점, 교구별 지역 특성에 따른 효과적 교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교구편제 개선을 위한 연구시간이 필요한 점, 법인을 통합 운영할 경우 다시 분리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 교단의 교구법인 통합정책 결의 시행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3. 법인별 헌공 금전현황 및 교구별 관리 교도수

(원티스 통계자료 및 기부금내역 참고)

1) 법인별 헌공 금전액

법인명	헌공 금전액			
	109(2024)	108(2023)	107(2022)	94(2009)설립 전
(재)원불교	89,005,018,736	82,073,249,363	74,790,180,832	58,414,050,284
경기인천	13,765,976,095	13,496,648,604	10,364,551,212	9,251,176,419
경남	9,123,398,671	6,618,825,314	5,557,955,325	4,981,658,466
광주전남	7,599,771,277	7,500,095,033	6,872,292,938	6,386,837,664
대구경북	4,789,962,799	4,310,009,496	4,627,922,661	3,207,264,577
대전충남	5,069,013,745	5,416,580,274	5,329,231,238	4,969,553,044
부산울산	9,579,194,313	9,772,535,898	9,919,962,100	8,795,467,357
서울	19,682,035,371	22,616,787,338	23,303,982,130	20,967,777,843
전북	18,786,486,057	16,913,029,872	16,598,788,655	14,708,801,801
합계액	177,400,857,064	168,717,761,192	157,364,867,091	131,682,587,455

2) 최근5년간 관리 교도수

교구명 \ 년도	109 (2024)	108 (2023)	107 (2022)	106 (2021)	105 (2020)	94(2009) 설립 전
총합계	126,542	122,114	119,029	116,916	114,907	128,601
강원	2,888	2,521	2,330	2,257	2,222	2,018
경기인천	8,503	8,187	7,996	7,762	7,688	7,513
경남	4,948	4,680	4,430	4,281	4,200	7,513
광주전남	7,787	7,602	7,430	7,367	7,309	10,754
군종	12,413	11,453	11,148	11,115	11,114	21
기타	8	8	8	8	8	18
대구경북	4,008	3,758	3,594	3,487	3,411	4,422
대전충남	3,625	3,512	3,448	3,386	3,398	4,402
미주동부	1,264	1,221	1,181	1,174	1,157	1,028
미주서부	561	557	540	544	550	598
부산울산	7,159	7,061	6,905	6,800	6,757	8,520
서울	18,260	17,956	17,610	17,447	17,171	15,121
영광	5,283	5,237	5,198	5,095	5,023	2,950
유럽	718	704	697	689	687	909
일본	180	166	165	163	136	342
전북	18,289	17,903	17,653	17,389	17,046	28,323
제주	905	894	876	903	868	1,862
중국	278	275	267	259	241	298
중앙	13,606	13,271	13,003	12,726	12,408	18,677
총부직할	13,411	12,894	12,421	11,976	11,469	11,809
총부해외직할	967	902	856	833	824	-
충북	1,461	1,332	1,253	1,235	1,200	1,503
평양	20	20	20	20	20	-

- 교도수=재가교도(열반자제외)
- 교도의 소속교당 기준은 12월 31일
- 소속이 없는 교도는 기타에 포함

4. 교구법인 분리의 장점과 단점

1) 긍정적 측면 (장점)

(1) 민법상 고려 (비영리법인)

- 각 법인의 기존 독립성과 자치 운영을 유지.
- 민법상 하부조직의 독립적 당사자 능력이 유지될 수 있음.
- 주무관청의 분산으로 단일 법인시 행정리스크 분산.

(2)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공익법인 세제혜택 의무)

- 개별 법인이기 때문에 각 법인의 규모에 따라 세무 의무가 상대적으로 경감.
- 종교법인 특례(기부금공제, 간이 신청 등) 활용 유리.
-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에서 세무업무 처리.
- 면제되는 의무 활용 용이.

(3)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 명의자 분산으로 소유자 합산으로 인한 과세표준 금액의 축소로 인한 분산 효과가 있음.

(4) 현장 자율성 강화 및 교화 활성화 : 각 교구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행정, 재정,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창의적이고 신속한 교화 활동이 촉진되었습니다.

(5) 책임 경영 및 리더십 강화 : 교구 단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면서 교구장과 실무진의 리더십과 책임 경영 문화가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6)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 교구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짐으로써 지역사회의 필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사업을 통해 교단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2) 한계 및 문제점 (단점)

(1) 민법상 고려 (비영리법인)

- 법인별로 정관,登記, 감독 대응이 중복되고, 내부 규정(이사회, 위원회 등)도 중

복 관리 필요

- 동일, 유사 사업간 중복 투자, 인력운용 비효율이 지속될 우려.

(2)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공익법인 세제혜택 의무)

- 법인별 신고, 공시, 전용계좌 관리가 분산되어 시스템 인력 비용 증가.
- 법인 간 비용정산, 공동경비 배분이 불명확하면 손금불산입 등 세무리스크 발생.
- 법인 간 현금출연, 자선이동 빈발시 상증법상 출연목적외 사용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지고, 법인별 출연재산보고가 중복 누락될 위험.

(3) 실무 역량 및 전문성 부족 : 특히 서울 교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구에서 법률, 세무, 회계, 부동산 관리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 역량이 부족하여 운영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법인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전무출신들의 단기 근무 및 잦은 인사이동으로 이어져 전문성 축적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4) 행정의 복잡성 및 비효율 : 법인별로 중복된 행정 업무로 인해 행정 비용이 증가하고, 세무 및 부동산 관련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했습니다.

(5) 재정적 취약성 : 서울 교구를 제외한 대부분 교구의 재정 기반이 영세하여 독립적인 법인 운영을 지속하는 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전문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6) 갈등 및 협력 약화 : 법인 간의 업무 혼선과 갈등이 발생하고, 중앙과 교구 간 의사소통 장애가 보고되는 등 교단 내 유기적 협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7) 통합적 대응력 저하 : 교단의 일관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며, 대외적 사안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사불란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해외 법인의 경우, 본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모니터링 없이는 운영권을 잃는 등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5. 교구법인 통합의 효과와 과제

1) 긍정적 효과

(1) 민법상 고려 (비영리법인)

- 법인격, 지배구조 일원화로 의사결정 감독라인이 단순

(2)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공익법인 세제혜택 의무)

- 하나의 법인으로 관리 간소화, 세입, 지출 통합 집계 및 세무신고.

- 세무 시스템 통합 활용.

-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 주식보유 한도 등 의무관리의 중앙화.

(3)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중앙에서 최적화(?)

(4) 효율성 증대 및 책임 소재 명확화 : 복잡한 세무, 부동산 등의 사무 절차를 표준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리스크 감소 :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법적, 세무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

(6) 정책의 일관성 및 통합적 실행력 강화 :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교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7) 영세 교구 부담 완화 : 재정적으로 취약한 영세 교구의 행정 유지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2) 한계 및 과제

(1) 민법상 고려 (비영리법인)

- 정관변경, 교구법인 해산, 청산 주무관청의 허가 대상, 절차 및 증빙(자산, 부채 승계, 채권자 보호 등) 준비가 큼.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설립, 정관변경, 주소이전 등 폭넓게 주무관청 허가, 보고, 등기를 요구)

- 종교, 지역 단위 자치, 정체성 약화 우려.

(2)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공익법인 세제혜택 의무)

- 통합으로 규모(자산, 수입) 상향으로 외부회계감사 대상, 세무확인 등 의무 범위 확대 가능.

- 국내 주식 5%초과 보유시 현금출연재산 및 운용소득 매년 80%이상 의무지출.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 및 재무제표 결산 공시 의무.

- 자산 규모, 출연재산 규모 집중으로 국세청 보고 및 감사 강도가 높아지고, 주식보유 규제 충족을 위한 내부회계 세무 통제 시스템 고도화 필요.(익산세무서 컨설팅 시 내부 회계 및 세무 통제 담당 인력 다수 필요 제안).

(3) 종합부동산세

- 2021년 지방세(토지분)의 세제 개편으로 인한 전, 답, 임야 등 세액증가.
- 자산 집중으로 특정 과세군(종합합산토지 등) 세부담이 증가.
- 합산배제, 특례신청의 오류 누락시 국세청 패널티 증가.

(4) 내부 저항 및 혼선 : 기존 운영 방식에 익숙한 인원과 지역별 이해관계자들의 변화에 대한 저항이나 내부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중앙 집중화의 경직성 : 모든 권한이 중앙으로 집중될 경우, 현장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워지고 의사결정이 경직될 위험이 있습니다.

(6) 통합 과정의 비용 및 시간 : 민법을 적용받는 재단법인(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은 상법을 적용받는 회사법인과 같은 합병이란 제도가 없습니다.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 해산과 청산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통합을 위한 법적 절차, 시스템 구축 등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원기 104년 정책연구소, 교구자치체 방향성 연구 보고서 참고)

6. 핵심 쟁점 재검토 : 세무 및 행정 문제의 실체

과거 법인 통합 논의 당시, 분리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지적되었던 것은 세금 문제와 법인 업무의 복잡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기 105년(2020년) '법인정책 점검 및 준비 TF'의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이 일부 오해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TF팀의 핵심 결론은 "법인을 분리하여도 세금문제는 없으며, 법인업무는 해결 가능하고 관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세금 문제의 진실:

문제의 핵심은 '고유목적사업용 자산'과 '수익사업용 자산'의 구분입니다. 교당과 같은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은 법적 요건(3년 이상 사용 등)을 충족하면 이전 시 증

여세나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막대한 세금 부담은 임대사업용 건물 등 '수익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여의도교당의 수익자산 이전 시 약 20억 원의 법인세와 8억 원의 취득세가 예상되었습니다.

TF팀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익자산의 소유권은 중앙 법인에 그대로 두되, 회계 단위를 분리하여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실질적으로 교구에 귀속되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식은 법인 분리의 목적인 재정권 확보를 달성하면서도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입니다.

오히려 교구가 소유한 수익자산을 중앙으로 이전해야 하는 '법인 통합' 시에 더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 행정 업무 문제의 해결 방안 :

교구의 전문 인력 부족 문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맞습니다.

이에 대해 TF팀은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법률 및 세무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는 중앙 법인에서 일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교구 담당 인력을 중앙 법인에서 일정 기간 파견 근무를 통해 교육한 후 교구에 배치하는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재검토를 통해, 세금과 행정 문제는 법인 분리를 가로막는 절대적인 장애물이 아니라, 전략적 설계와 지원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실무적 과제임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통합이나 분리나'의 선택은 실무적 어려움보다는 "교단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하는 교단 경영의 전략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 귀결됩니다.

7. 종합적 교훈 및 제언

원불교 교구법인의 통합과 분리 과정은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제도는 없으며, 교단의 상황과 역량에 맞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또한, 법인 통합과 분리에 대한 정책으로 인한 교단 내부 구성원들의 법인의 개념과 사회법과 행정 시스템을 통한 법인 운영의 인식 개선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통합-분리' 이분법을 넘어서는 유연한 전략적 접근 : '통합이나, 분리나'의 이분법적 접근은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성공의 관건은 법인 형태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직 리더십, 실무 역량, 그리고 구조적 견제 장치의 설계와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규모, 현장 역량, 시대 변화에 맞는 전략적 선택과 보완이 중요합니다.

2. 단계적·차등적 하이브리드 모델 도입 : 모든 교구에 획일적인 모델을 적용하기보다, 각 교구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다른 모델을 적용하는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교구처럼 운영 의지와 노하우가 축적된 곳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분리 체제를 유지하고,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영세 교구는 중앙총부 법인으로 통합하여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중앙총부의 역할 재정립 : '통제'에서 '지원'으로 교구자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앙총부의 역할이 통제와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정책 연구, 법률·세무·회계 지원, 인재 양성 등 핵심 역량을 지원하는 '싱크탱크' 및 '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해외 법인 사례에서 보듯이 '지원-통제-자치'의 삼각 균형이 중요합니다.

4. 실무 역량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 교구 자치의 성패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교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변화 관리 프로그램을 확립하고, 유급직 재가 인력을 포함한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8. 결론

원불교 교구법인의 통합과 분리에 대한 경험은, 조직의 구조적 형태 그 자체보다 그 구조를 운영하는 주체의 리더십과 실무 역량,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유연한 지원 시스템이 교단 발전의 핵심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세무 및 행정 문제는 극복 불가능한 장애물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통해 관리 가능한 과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교단 운영은 '통합'과 '분리'라는 이분법적 선택을 넘어, 각 교구의

현실적 역량과 국가의 법적 요구, 그리고 교단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역량이 있는 교구에는 과감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원이 필요한 교구에는 중앙총부가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해 현장의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교단 전체의 안정성과 통일성을 조화시키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궁극적으로 어떠한 체제를 선택하든, 그 목적은 교화 활성화와 교법 실현이라는 대의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구자치 발전을 위한 3단계 로드맵

1단계 : 준비 및 진단 단계 (향후 1년)

목표 : 교단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교구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맞춤형 전략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주요 실행 과제:

1. '미래교구정책위원회' 구성 (1분기):

내용 : 교정원, 교구, 외부 전문가(법률, 세무, 행정)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는 과거 TF 활동의 성과를 이어받아 지속적인 연구와 실행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역할 : 교구 역량 진단, 중앙총부 기능 재조정 연구, 관련 법규 개정안 초안 마련 등을 주도합니다.

2. 전 교구 역량 진단 실시 (2분기):

내용 : 재정 자립도, 행정 인력의 전문성, 교화 성과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교구의 현재 역량을 진단합니다.

결과 활용 :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교구를 '자립형', '성장형', '지원형' 등급으로 잠정 분류하여 향후 시범 운영 모델의 기초 자료로 삼습니다.

3. 중앙총부 기능 재조정 연구 및 지원센터 설립 준비 (3분기):

내용 : 중앙총부의 역할을 기존의 '관리·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교리 연구, 전략 수립 등 핵심 기능과 법률·세무·회계 등 전문 분야를 '지원'하는 역할로 재정립합니다.

실행 : 교구에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교구법인 지원센터'의 설립 계획을 수립합니다.

4. 법률 및 세무 재검토 최종 보고 (4분기):

내용 : '법인정책 점검 TF'의 연구 결과를 현시점에서 재검증하고, 특히 수익자산의 관리 및 이전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2단계: 시범 운영 및 모델 구축 단계 (2~3년 차)

목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시범 교구를 선정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실제 적용하여 최적의 운영 모델을 구축합니다.

주요 실행 과제:

1. 시범 교구 선정 및 협약 체결 (1분기):

내용 : 1단계 진단 결과에 따라 '자립형'(예: 서울교구)], '성장형', '지원형' 교구를 1~2곳씩 시범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모델에 맞는 권한 이양 및 지원 내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2. '하이브리드 모델' 시범 운영 (2년간):

자립형 교구 : 인사, 재정, 행정 전반에 대한 완전한 자치권을 부여하고 독립 법인으로 운영합니다. 중앙총부는 자문 역할만 수행합니다.

지원형 교구 : 법인격은 중앙총부에 통합된 형태로 유지하며, 교구는 교화 활동에 집중합니다. 중앙총부 내 '교구법인 지원센터'가 법률, 세무, 회계 등 복잡한 행정 업무를 직접 대행 및 지원합니다.

성장형 교구 : 자치권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중앙총부의 컨설팅과 교육 지원을 통해 '자립형'으로 전환을 준비합니다.

3.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가동 (연중):

내용 : 교구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앙총부 '교구법인 지원센터'에서의 파견 근무(인턴십) 또는 정기적인 전문 교육을 의무화하고 시행합니다.

4. 중간 평가 및 모델 보완 (매년 말):

내용 : 시범 운영 과정의 문제점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각 모델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최종 모델을 보완·발전시킵니다.

3단계 : 전면 시행 및 안정화 단계 (4년 차 이후)

목표 : 시범 운영을 통해 검증된 최적의 모델을 전 교구로 확대 적용하고, 교구자치제가 교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합니다.

주요 실행 과제:

1. 시범 사업 결과 보고 및 전 교구 설명회 개최 (1분기):

내용 : 시범 사업의 최종 결과를 전 교구에 투명하게 공유하고, 확정된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교단적 공감대를 최종적으로 확보합니다.

2. 전 교구 대상 모델 선택 및 적용 (2분기):

내용 : 각 교구가 자신의 역량 진단 결과와 미래 계획에 따라 '자립형' 또는 '지원형' 모델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전면적으로 시행합니다.

3. 교헌·교규 최종 개정 및 공포 (3분기):

내용 : 교구자치제의 새로운 운영 방식, 중앙총부와 교구의 위상과 역할, 권한과 책임 등을 명시한 교헌·교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공포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4. 지속적인 평가 및 환류 시스템 정착 (연중):

내용 : 정기적인 교구 운영 평가와 중앙총부 지원센터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원형' 교구가 '자립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이 로드맵은 교단의 현실적 역량을 고려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단 구성원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참고문헌>

1. 원불교정책연구소. (원기104). 교구자치제 방향성 연구 보고서.
2. 법인정책 점검·준비TF팀. (원기105). 법인정책 점검 및 준비 TF 활동 보고서.